

주간 통일정세

2018-09

Contents

I. 한반도 평화 및 협력

1. 평화관련 주요 동향
2. 남북 교류협력

I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V.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 남북자 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한반도 평화 및 협력

■ 개요

분류	일자	
평화 관련 주요 동향	2.27	北불교계 “평창올림픽으로 관계개선 국면…통일대진군 시작돼”(연합뉴스)
	2.25	김영철 등 北고위급대표단 방남…‘천안함’ 질문엔 ‘묵묵부답’(연합뉴스)
남북	2.26	北응원단·선수단 등 299명 귀환…“하나란 것 실감”(연합뉴스)
교류협력	2.27	北김영철, 정의선 육로로 귀환…방남성과 질문엔 ‘무응답’(연합뉴스)
	3.02	IOC 산하 ‘올림픽 채널’, 남북 단일팀 다큐 영상물 공개(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평화관련 주요 동향

가. 남북한

2018. 2. 27.

■ 北불교계 “평창올림픽으로 관계개선 국면…통일대진군 시작돼”(연합뉴스)

- 조선불교도련맹(조불련) 전국신도회는 27일 한국교수불자연합회에 보낸 서한에서 “이번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계기로 북과 남에는 관계개선의 전환적 국면이 열리고 있다”며 “겨레의 힘찬 통일대진군이 시작됐다”고 평가함.
- 조불련 전국신도회는 “외세가 강요한 국토양단과 민족분열의 고통은 장장 70년을 넘어섰다”며 “조국통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민족 최대의 절박한 과제”라고 강조함.
- 이어 “창립 30돌을 맞이한 한국교수불자연합회에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며 “귀연합회와 우리 사이의 협력과 연대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게 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한다”고 밝힘.

나. 국제사회

■ 특이사항 없음.

2. 남북 교류협력

2018. 2. 25.

■ 김영철 등 北고위급대표단 방남…‘천안함’ 질문엔 ‘묵묵부답’(연합뉴스)

-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평창동계올림픽 폐막행사 참석을 위한 북측 고위급대표단이 25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남함.
- 김영철 부위원장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지원인원 6명 등 8명으로 구성된 고위급대표단은 이날 오전 9시 49분께 경의선 육로를 통해 군사분계선(MDL)을 넘은 뒤 9시 53분께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 도착함.
- 이들은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 저지를 위해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통일대교를 피해 통일대교 동쪽에 있는 전진교를 통과해 남측으로 향함.

2018. 2. 26.

■ 北응원단·선수단 등 299명 귀환…“하나란 것 실감”(연합뉴스)

- 평창동계올림픽에 참여한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등 299명이 26일 낮 경의선 육로를 통해 북한으로 귀환함.
-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관계자 4명과 선수단 45명, 응원단 229명, 기자단 21명 등으로, 이들은 이날 오후 12시33분께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출발해 5분 뒤 군사분계선(MLD)을 넘어 북한으로 돌아감.
- 북측이 갖고 온 관련 화물은 이날 오전 10시께 이미 MDL을 통과해 북측으로 넘어갔다고 통일부는 전함.

2018. 2. 27.

■ 北김영철, 경의선 육로로 귀환…방남성과 질문엔 ‘무응답’(연합뉴스)

-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27일 2박 3일간의 방남 일정을 마치고 귀환함.
- 김 부위원장 등 고위급대표단은 이날 오전 11시55분께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출발했고 5분 뒤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한으로 돌아감.

- 김 부위원장은 CIQ에서 ‘방남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지만 CIQ를 빠져나가면서는 만족한 듯한 흡족한 표정으로 웃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으며 최강일 외무성 부국장 등 다른 대표단들도 ‘북미대화 조건’ 등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고,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이들을 CIQ에서 배웅함.

2018. 3. 2.

■ IOC 산하 ‘올림픽 채널’, 남북 단일팀 다류 영상물 공개(연합뉴스)

- ‘올림픽 채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다류멘터리 영상물은 ‘평창이 대한민국에 남긴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1분 55초 분량에 남북한 주요 선수들과 새러 머리 감독의 인터뷰를 담았으며, 특히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성사된 남북 단일팀에 합류한 북한 선수 12명 중에서 경기를 뒀 김향미, 김은향을 강릉선수촌 내에서 인터뷰한 영상을 다룸.
- 인터뷰에서 한국의 그리핀은 “북한 선수들이 환영받는 느낌이 들고 최대한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곧바로 마음가짐을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전했으며, 머리 감독은 “스포츠는 정말로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다. 마지막 경기가 끝나고 라커룸에 들어갔을 때 모두가 서로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다. 정말로 특별한 순간 이었다”고 설명함.
- ‘올림픽 채널’은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은 얼음판 위에서 기적을 만들어 내지 못했지만, 분명 오래도록 지속할 인상을 남겼다”고 결론을 내림.

I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2.24	박봉주, 황해제철·동평양화력발전 현지시찰(연합뉴스) 北통신 “핵무력, 동족 겨냥 아니다…철저히 미국 겨냥”(연합뉴스)
	2.25	北아태평화위 “어떤 경우도 美에 대화구걸 안해”…펜스발언 비난(연합뉴스) 北신문 “美, 南과 합동군사연습 재개하면 단호히 대처”(연합뉴스)
	2.27	北 신문 “美가 핵 포기 나서면 세계 비핵화 풀려”(연합뉴스) 北 “국제금융감독기구, 최대 핵보유국 美 제재해야”(연합뉴스)
	2.28	美 북한전문매체 “북한 최설희 외무성 국장, 부상 승진”(연합뉴스)
	3.1	北신문, 3·1절에 “외세간섭 결단코 저지시켜야”…美 겨냥(연합뉴스)
	3.2	北, 시리아와 거래설에 “화학무기 반대…생산한 것 없어”(연합뉴스)
	군사	2.25
경제	3.2	WSJ “북 제재고통 느끼기 시작…중, 의류·수산물 차단”(연합뉴스)
사회 문화	-	-
외교 국방	2.24	北, ‘美 대북 사이버공격 준비’ 보도에 “전쟁도발 범죄”(연합뉴스)
	2.25	北외무성 “어떤 봉쇄도 전쟁행위 간주”…美 추가제재에 반발(연합뉴스) 北, 총련 총기테러 비난…“日, 재발 않게 특단조치 취해야”(연합뉴스)
	2.26	옴트는 북미대화 분위기…“北 ‘실험중단 용의’ 표명시 돌파구”(연합뉴스) 美 “방한 미국 대표단과 북한 인사간 아무 접촉도 없었다”(연합뉴스) 北김영철 “美와 대화의 문 열려있어”…전제조건은 거론 안 해(연합뉴스)
	2.27	트럼프 “적절한 조건 아니면 북한과 대화 안할 것”(연합뉴스) 北매체, ‘펜스 회동 北이 취소’ 주장 거론하며 “햇나발질”(연합뉴스) 北신문 “美, 南에 경제적 압력…남북관계 개선 못하도록 압박”(연합뉴스) “‘대북교역 중단’ 필리핀, 이행절차 착수…규정 마무리 작업”(연합뉴스)
	2.28	“北, 시리아와 화학무기 품목 거래해 외화벌이…기술자도 파견”(연합뉴스)
	3.1	‘北대변’ 조선신보 “북미대화 조건 미국이 만들어야”(연합뉴스) 北외무성 “제재 압박에 달라붙는 트럼프 처지 불쌍”(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8. 2. 24.

■ 박봉주, 황해제철·동평양화력발전 현지시찰(연합뉴스)

- 박봉주 내각 총리가 황해제철연합기업소와 동평양화력발전소를 현지 시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4일 보도함.

2018. 2. 28.

■ 美 북한전문매체 “북한 최선희 외무성 국장, 부상 승진”(연합뉴스)

- 북한의 ‘대미 외교라인’ 핵심 인사로 꼽히는 최선희 외무성 북아메리카국 국장이 외무성 부상(차관급)으로 승진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NK뉴스가 28일 보도함.
- NK뉴스는 이날 “평양 주재 당국자들에게 지난주 회람된 외교공한(diplomatic note)에 따르면, 전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인 최선희가 부상급(vice-ministerial) 직책으로 승진했다”고 전함.
- 한 소식통은 최선희의 승진이 한성렬 현 외무성 부상의 좌천과 관련됐을 수 있음을 시사한 반면, 또 다른 소식통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건강이상과 연관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NK뉴스는 전함.

다.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8. 2. 24.

■ **北통신 “핵무력, 동족 겨냥 아니다…철저히 미국 겨냥”(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논평을 통해 덴 코츠 국가정보국(DNI) 국장과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부 사령관 등의 최근 발언을 거론하면서 “우리의 자위적 핵을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몰아대며 부산을 피우던 트럼프패들이 최근 갑자기 ‘적화통일용’이라는 궤변을 꿰치고 있어 세상 사람들을 웃기고 있다”고 밝힘.
- 논평은 “우리의 국가 핵 무력은 조선반도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민족공동의 전략자산으로서 결코 동족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면서 “코앞에 있는 손바닥만한 남조선이나 타고 앉자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핵 무력을 건설하고 대륙간탄도로켓까지 보유하였다고 하면 누구든지 코웃음을 칠 것”이라고 덧붙임.
- 논평은 그러면서 “우리의 핵무기는 철저히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서 미국이 조금이라도 불질을 하려 한다면 미국본토 전체가 단호하고도 무자비한 핵 세례를 받게 되어있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함.

2018. 2. 25.

■ **北아태평화위 “어떤 경우도 美에 대화구걸 안해”…펜스발언 비난(연합뉴스)**

- 아태평화위는 25일 대변인 성명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우리의 최고 존엄과 공화국 정권을 악랄하게 걸고 드는 자들과는 상종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뒤 “오늘은 물론 앞으로 100년, 200년이 지난 후에도 절대로 마주앉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며 그 어떤 위협도 아니다. 미국은 미련하고 조폭한 악담질을 해댄 대가를 가장 고통스럽게 치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 아태평화위는 “펜스와 같은 인간 추물을 곁에 끼고 있는 트럼프도 똑바로 알아두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펜스는 부질없는 광언으로 미국을 얼마나 위태로운 곤경에 몰아넣었으며 제 놈의 처지는 또 어떤 가련하고 처참한 나라에 굴러떨어졌는가를 제 눈으로 보면서 그야말로 고달픈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위협함.
- 또 펜스 부통령이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식 참석차 방한했을 당시 행보와 관련해 “반공화국 대결 광기를 부리며 몰상식하게 놀아대어 세계 면전에서 처참하게 망신을 당하였다”고 비난하며 “실책을 범하였으면 자기를 반성하고 자중자속하는 것이 마땅한 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함.

■ **北신문 “美, 南과 합동군사연습 재개하면 단호히 대처”(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25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정세 격화 책동’이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미국이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을 부추겨 끝끝내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는 것은 완화의 기운이 감도는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를 원래의 초긴장 상태로 되돌려 세우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라고 강변한 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 남조선 괴뢰들과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기만 하면 우리 천만 군민은 그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만일 미국이 조선반도 정세 완화를 바라고 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합동군사연습 계획을 걷어치워야 한다”면서 “그것이 마땅한 처사”라고 주장함.
- 신문은 “얼어붙었던 북남관계에서 나타난 눈석이(썩인 눈이 속으로 녹아 스러짐)로 하여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가 전례 없는 열기를 띠고 진행되었다”면서 “이것은 우리 국가의 주동적이며 담대한 조치, 선의와 아량이 비긴 적극적인 노력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하기도 함.

2018. 2. 27.

■ **北 신문 “美가 핵 포기 나서면 세계 비핵화 풀려”(연합뉴스)**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양키식 파렴치성의 극치’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지사 및 시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생산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이 그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비난함.
- 신문은 “트럼프가 핵으로 인류의 생존과 세계 평화를 유린해온 미국의 최악은 덮어놓고 도리어 남을 걸고 든 것은 양키식 파렴치성과 만용의 극치”라며 “다른 나라들이 핵 개발과 현대화를 먼저 중단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삿대질은 문제 해결의 선후차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정치 미숙아의 무지스러운 생억지”라고 비난함.
- 그러면서 “선참으로 핵 야망을 포기해야 할 당사자는 다름 아닌 미국”이라며 “미국이 절대적인 핵 우세로 세계를 제패하려는 허황한 망상을 털어버리고 핵 포기나 나선다면 세계의 비핵화 문제도 쉽게 풀릴 것”이라고 강조함.

■北 “국제금융감독기구, 최대 핵보유국 美 제재해야”(연합뉴스)

- 북한의 ‘자금세척 및 테러 자금 지원 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대변인은 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FATF 총회에서 조선의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지원 방지 체계에 여전히 결점들이 있다느니, 대량살상무기 전파 자금 지원을 차단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등 판에 박힌 소리로 일관된 반공화국 ‘공개 성명’이라는 것이 채택되었다”고 언급함.
-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국제금융감독기구를 악용한 미국의 상투적인 책동의 일환으로 단호히 배격한다”라며 “기구 ‘공개 성명’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미국이 늘어놓는 궤변을 그대로 담은 서푼짜리 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이어 “기구 측이 진정으로 대량살상무기 전파 자금 지원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세계 최대의 핵무기 보유국이며 오늘도 그 유지와 현대화를 위하여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을 퍼붓고 있는 미국을 단단히 문제시하고 미국에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2018. 3. 1.

■北신문, 3·1절에 “외세간섭 결단코 저지시켜야”…美 겨냥(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1일 ‘온 민족이 떨쳐나 외세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짓부수자)’ 제하의 1면 사설에서 “3.1 인민봉기가 있는 때로부터 근 한 세기가 흘러갔다. 그동안 세계는 멀리 전진하고 시대는 크게 달라졌지만, 우리 민족은 아직까지 전국적 범위에서 자주권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민족 내부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책동을 결단코 저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해방 후 일제를 대신하여 우리 조국의 절반 땅을 강점한 미국은 지난 70여 년간 남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체제를 강화하면서 인민들의 존엄과 권리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체제를 단호히 끝장내야 한다”고 강변함.
- 이어 “날로 무분별해지는 미국의 핵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는 것은 초미의 민족사적 과제”라며 “조선반도(한반도)에 핵전쟁의 재난을 몰아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을 반대하는 전민족적 투쟁에 온 겨레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선전함.

2018. 3. 2.

■ **北, 시리아와 거래설에 “화학무기 반대…생산한 것 없어”(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공보실장은 1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은 어용 나팔수들을 내세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조선제재위원회의 조사보고서에 반영된 내용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시리아의 화학무기 제조에 협조했다는 억지 주장을 내돌리고 있다”고 비난함.
- 그러면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명백히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화학무기를 개발, 생산, 비축한 것이 없으며 화학무기 자체를 반대한다”고 강조함.
- 공보실장은 “이번에 미국이 조작해낸 우리와 시리아 사이의 협조설도 우리를 화학무기 보유 및 전과국으로 매도하여 반공화국 제재·압박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전면적인 해상봉쇄를 기어이 실현하는 동시에 시리아에 대한 군사적 간섭을 정당화해보려는 서푼짜리 술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2018. 2. 25.

■ **“121·180부대·91호실·랩110…北 사이버戰부대 조직적 활동”(연합뉴스)**

- 니혼케이자이신문은 25일 미국의 사이버보안 전문업체인 맥아피와 김홍광 NK 지식인연대 대표의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휘하의 정찰총국에 사이버전 지도부를 설치했다고 전함.
- 사이버전 지도부에는 121부대, 180부대, 91호실, 랩110 등의 기구가 설치됐으며, 이들 가운데 1998년 김정은 국방위원장 시절 창설된 121부대가 최대규모이고 외국의 통신과 전력, 항공 등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공격을 담당하며, 소속 인원은 수천명으로 추정됨.
-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로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180부대는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확보가 목표이며, 외국 금융기관 해킹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는 것이 주된 역할인 것으로 추정되며 500여명이 이 부대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들은 또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에도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는데 북한과 관계없는 개인이나 기업을 창구로 용역 수주를 한다는 것으로 이들이 제작한 소프트웨어는 필요시 원격조작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사회혼란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음.

- 북한은 또 외국의 과학기술정보 획득을 목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을 담당하는 91호실(500명), 사이버 공격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한 랩110(약 500명)도 구축함.

나. 한국 및 미국

- 특이사항 없음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2018. 3. 2.

- **WSJ “북 제재고통 느끼기 시작·중, 의류·수산물 차단”(연합뉴스)**
 -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 고삐를 죄면서 북한이 제재의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중국 훈춘발 기사를 통해 보도함.
 -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의류와 수산물 등의 중국 유입이 차단되면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북한 내에서 가격상승 현상 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임.
 - WSJ은 북한 라선지역에서 의류공장을 운영하던 중국인 기업인의 사례를 들어 중국 당국이 안보리 결의 이행을 강화하면서 지난해 11월 공장 문을 닫았고, 공장에 종사하던 북한 근로자 2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전했는데 이 기업인은 라선 지역에는 자신과 같은 공장이 10여 개가 있으며 수천 명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그들 모두는 현재 일자리가 없다”고 전함.
 - 북한과 수산물 교역에 종사해오던 중국 측 인사들도 계와 오징어 등 수산물이 라선 창고에 수개월 동안 묶여있다고 전했으며, 그들은 중국 당국이 지난 1월 극히 소량의 북한산 담배를 중국으로 반입하는 것도 막고 있다고 전함.

다. 대외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 특이사항 없음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8. 2. 24.

- **北, '美 대북 사이버공격 준비' 보도에 "전쟁도발 범죄"(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24일 '위험천만한 대조선 침략 기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최근 정보기관들을 총발동(총동원)하여 우리에게 대한 대규모적인 사이버 공격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용납할 수 없는 반국가적 테러 행위,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파렴치한 전쟁 도발 범죄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함.
 -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에게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침략 야망을 실현하려는 어리석은 꿈을 버려야 한다"라며 "가질 것은 다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는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그 어떤 전쟁방식에도 기꺼이 대응해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함.
 - 신문은 "지금 미국은 우리의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 참가로 북남 화해의 분위기가 싹트고 있는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무력 증강과 군사적 도발 책동에 그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이 북남관계 개선

과 평화 분위기를 대결과 전쟁국면으로 되돌려 세우려는 고의적인 도발 책동이 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함.

2018. 2. 25.

■ **北외무성 “어떤 봉쇄도 전쟁행위 간주”…美 추가제재에 반발(연합뉴스)**

- 북한은 25일 미국의 추가 단독 대북제재 조치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그 어떤 봉쇄도 우리에게 대한 전쟁행위로 간주할 것이며, 미국이 정말로 우리와 거칠게 맞설 담력이 있다면 우리는 굳이 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담화는 또 “트럼프는 이번에 우리와 다른 나라들과의 해상무역을 완전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재조치를 발표하면서 이 제재가 먹어들어가지 않으면 ‘매우 거친 두 번째 단계’의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폭언으로 우리를 노골적으로 위협했다”고 비난함.
- 담화는 “우리는 바로 미국의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여 자기를 지키기 위한 정의의 보검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북남관계를 좋게 발전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가 기울이는 온갖 성의와 노력을 무시하고 미국이 기어코 우리를 건드리며 도발을 걸어온다면 우리는 미국이 거칠게 나오든 사납게 광기를 부리든 우리식의 대응방식으로 미국을 휘어잡고 다스릴 것”이라고 위협함.

2018. 2. 26.

■ **음트는 북미대화 분위기…“北 ‘실험중단 용의’ 표명시 돌파구”(연합뉴스)**

-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25일 ‘북미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밝힌 사실이 청와대를 통해 공개되자 백악관은 곧바로 “북한의 메시지가 비핵화로 가는 길을 따르는 첫걸음을 의미하는지 볼 것”이라고 발언함.
- 미측의 반응은 북한이 언급한 북미대화의 맥락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감안한 신중 기류로 해석됨.
- 외교 소식통은 26일 “북한이 대화 용의를 미국에 직접 밝힌 것이 아니고, 무엇을 위한 대화인지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반보’(半步) 진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평가함.
- 그럼에도 평창올림픽 계기에 북한이 한국을 매개로 삼아 북미대화 용의를 밝힌

것은 북미대화로 가는 길에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으며, 대화를 위한 후속 논의가 뉴욕채널 등을 통해 북미 양측 간에 앞으로 이뤄질지 주목됨.

■ **美 “방한 미국 대표단과 북한 인사간 아무 접촉도 없었다”(연합뉴스)**

- 평창동계올림픽 폐막식 계기에 방한한 미국 대표단은 북한 인사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다고 주한미국대사관 측이 26일 밝힘.
- 주한미국대사관의 한 관리는 “이번 방한 기간 미국 대표단과 북한 인사와의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no interaction)”며 “미국 정부 고위 관리도 (언론에)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한다”고 전함.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장녀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이 이끄는 미국 정부 대표단은 지난 23일 방한해 이날 오전 출국함.

■ **北김영철 “美와 대화의 문 열려있어”…전제조건은 거론 안 해(연합뉴스)**

-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및 통일전선부장이 26일 “미국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또다시 밝힘.
-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한 호텔에서 가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오찬 회동에서 “우리는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여러 차례 이미 밝혔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함.
- 청와대 관계자는 “김 부위원장이 미국과 대화 용의가 있다고 말하면서 내건 전제조건 같은 것은 없었다”고 전함.

2018. 2. 27.

■ **트럼프 “적절한 조건 아니면 북한과 대화 안할 것”(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북미 직접 대화와 관련해 “그들은 대화를 원하고 있으나 우리는 오직 적절한 조건(right conditions) 아래에서만 대화하기를 원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들과의 연례 회동에서 북한과 협상했던 전임 정권들이 모두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힘.
- 그는 또 “우리는 북한에 매우 강경하게 해왔다”면서 “북한이 처음으로 대화를 원하고 있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볼 것”이라고 밝힘.

■ **北매체, ‘펜스 회동 北이 취소’ 주장 거론하며 “헛나발질”(연합뉴스)**

-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가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식 참석을 계기로 추진됐던 북미 고위급 대표단의 회동이 북측 취소로 불발됐다는 미국 측 언급에 대해 ‘헛나발질’이라고 27일 비난함.
-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식에 참석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기사에서 “(펜스 부통령이) 대화 상대와 마주칠까봐 비실비실 피해다니다가 제풀에 맥이 빠져 삼십육계 줄행랑을 놓은 주제에 ‘북과 만날 계획이었으나 북이 갑자기 취소하여 못 만났다’는 돌미륵도 포복절도할 헛나발질을 해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라고 주장함.
- 다만 이 매체의 표현이 북미간 회동이 계획됐다가 북한의 취소로 무산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동 무산 사실을 공개하는 등 펜스 부통령 측이 보인 태도를 비난하는 것인지는 불확실해 보임.

■ **北신문 “美, 南에 경제적 압력…남북관계 개선 못하도록 압박”(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트럼프 패당이 남조선에 각방으로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 있는 속심은 명백하다”면서 “남조선 당국이 북남관계 개선에 선불리 나서지 못하도록 압박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함.
- 노동신문은 이날 ‘날강도의 본성을 드러낸 망동’이라는 제목의 정세해설 기사에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방침과 최근 한국산 세탁기 등에 대한 셰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 등 잇단 미국의 통상압박 정책을 비난하면서 이같이 밝힘.
- 신문은 “조선반도(한반도)에 평화적 환경이 마련되면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 대결 소동의 명분이 사라지고,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패권전략 실현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고 타산하고 있는 트럼프 패당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북남관계 개선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함.

2018. 3. 1.

■ **‘北대변’ 조선신보 “북미대화 조건 미국이 만들어야”(연합뉴스)**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일 “트럼프가 말하듯이 오직 적절한 조건 아래서만 (북미)대화가 가능하다면 그 조건은 미국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함.
- 조선신보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내비치는 조미(북미) 대화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저들의 난처한 처지를 모면해보려고 조선(북

한)의 의중을 타진하기 위한 이른바 탐색적 대화의 가능성을 일부러 내비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힘.

- 신문은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차 방남해 북미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을 언급하며 “조선이 마치나(마치) 제재와 압력에 굴복하여 대화를 구걸한 것처럼 국제여론을 오도하였다”고 지적했고, 이어 “실상은 전혀 다르다”며 “핵보유국 조선과의 무력충돌을 피하려 든다면 트럼프는 조선과 대화할 방법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함.

■ 北외무성 “제재·압박에 달라붙는 트럼프 처지 불쌍”(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은 1일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 명의 담화에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선박 28척과 27개의 해운 및 무역업체, 개인 1명 등 총 56개의 대상에 대한 제재를 발표한 사실을 거론하며 “아직도 제재와 압박이 우리에게 통한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광적으로 달라붙는 트럼프 패의 처지가 가금하기(불쌍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함.
- 이어 “트럼프가 이번 제재가 먹어들어가지 않으면 ‘매우 거친 두 번째 단계’의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폭언으로 감히 우리를 놀래워보려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한 꾀변에 익숙해진 지 오래며 그에 대처할 방식도 따로 있다”고 밝힘.
- 그러면서 “미국은 눈을 크게 뜨고 우리 국가의 전략적 지위를 바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제라도 과연 미국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전략적이며 예지 있는 선택이 무엇인가에 대해 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함.

나. 북·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북·일 관계

2018. 2. 25.

■ 北, 총련 총기테러 비난…“日, 재발 않게 특단조치 취해야”(연합뉴스)

-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아태평화위) 25일 발표한 대변인 담화에서 “총련이 결성되어 오늘까지 역대 일본 정부들과 우익반동들이 총련 조직과 재일동포들에게 별의별 못된 짓을 다 하여 왔지만, 우리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신성한

- 영역인 총련 중앙회관에 감히 총질만은 못하였다”면서 지난 23일 발생한 일본 우익들의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본부 건물 총격 사건에 대해 비난함.
- 담화는 이어 “우리 공화국과 총련을 상대로 감행된 고의적인 정치적 도발이며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총련에 대한 전면탄압의 전주곡”이라고 주장함.
 - 그러면서 “일본 당국은 총련 중앙회관에 대한 총격 사건의 배후와 진상을 속속들이 까밝히고 이번 사건의 주범자, 공범자들을 엄벌에 처하며 다시는 총련과 재일 동포들에 대한 강력범죄와 테러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라. 북·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8. 2. 27.

■ “대북교역 중단 필리핀, 이행절차 착수·규정 마무리 작업”(연합뉴스)

- 최근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필리핀이 그 이행 절차에 착수한 사실을 유엔 제출 보고서에서 확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함.
- VOA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필리핀 정부는 지난달 11일 위원회에 제출한 안보리 대북결의 2321·2371·2375호 통합 이행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음.
- 보고서는 “전략무역관리법에 따라, 무역산업부가 관세국, 경제자유구역청 및 다른 관련 정부 기관들과 함께 관계부처들의 협의 및 공조를 통해 무역과 관련한 이행규칙 및 규정을 마무리 짓고 있다”고 소개함.
- 필리핀은 지난해 9월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경제 제재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앞서 필리핀은 북한의 4~5위 교역 상대국이었음.

2018. 2. 28.

■ “北, 시리아와 화학무기 품목 거래해 외화벌이…기술자도 파견”(연합뉴스)

- 미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27일(현지시간) 유엔 대북 제재위원회의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 및 위반 감시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인용해 2012~2017년 북한에서 시리아로 선박을 통해 탄도미사일 부품 등 최소 40건의 금수품목 이전이 있었다고 밝힘.
- 금수품목에는 화학무기 제조 과정에서 사용되는 내산성(acid-resistant·耐酸性) 타일과 밸브, 온도측정기 등도 포함됐는데, 북한을 대신해 일하는 중국 무역회사가 2016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내산성 타일, 스테인리스강 파이프와 밸브 등을 시리아에 보냈다고 보고서는 전하면서 이를 시리아 정권이 자국 화학무기 생산을 위해 북한에 돈을 주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함.
- 지난해 1월 내산성 타일을 실은 두 척의 선박이 시리아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중 해상에서 유엔 회원국에 의해 차단되면서 적발됐는데, 적발된 것은 무기수출을 관장하는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와 시리아 정부가 운영하는 '메탈릭 매뉴팩처링 팩토리'가 체결한 5건의 인도계약 가운데 일부였음.
- 또 북한이 화학공장으로 의심되는 시설 건설에 필요한 물자 50t을 시리아로 운송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시리아 정부의 화학무기 연구소인 시리아과학연구개발센터(SSRC)가 여러 유령 회사를 통해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에 자재 비용을 냈다고 밝힘.
- 대북제재위는 2016년 8월 북한의 미사일 기술자들이 시리아를 방문해 바르제와 아드라, 하마에 있는 화학무기 및 미사일 시설에서 일했다고 전했으며, NYT는 관련 시설에서 일하던 북한 기술자들의 모습이 포착됐다고 전하는 등 북한 기술자들이 계속 이 시설에서 일한다고 밝혔으나, 시리아는 국내에 북한 기술자가 없으며 시리아에 있는 북한인은 모두 체육 분야 종사자라고 주장함.

Ⅲ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02.26		미 국무부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해결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어”(연합뉴스)
			이방카 “최대 압박이라는 한국과의 공동 입장이 매우 중요”(연합뉴스)
			미 국방 차관보 “평창패럴림픽 뒤 한미 연합훈련 실시”(연합뉴스)
	02.27	북미 ‘대화조건’ 살바싸움 돌입…정부 ‘중재외교’ 본격화(연합뉴스)	
	02.28		美대사대리 “한미훈련 추가 연기 가능성 없어”(연합뉴스)
			국방부 “美와 한미연합훈련 추가연기 협의한 바 없다”(연합뉴스)
			청와대 “美에 한미연합훈련 추가 연기 요청한 적 없다”(연합뉴스)
	03.01		미 국방부 “한반도 주둔은 한국 초청에 따른 것”(연합뉴스)
03.02		美상원의원 측 “한국과 한미훈련 추가연기 논의 안했다”(연합뉴스)	
03.02		백악관 “한미정상, 긴밀한 협력 유지키로 약속”(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02.28	정부, 中대사 불려 ‘군용기 KADIZ 진입’ 항의·재발방지 요구(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인민일보, 韓美군사훈련 가능성 경계...“유관국들, 막대한 책임”(연합뉴스)
			中외교부, 문대통령의 북미대화 중재 환영...“직접 대화 필요”(연합뉴스)
	02.26	강경화, 유엔서 위안부 언급 “과거 잘못 반복해서는 안 돼”(연합뉴스)	
	02.27	외교부 “강경화 유엔 위안부 발언, 정부 원칙적 입장 표명”(연합뉴스)	강경화 유엔 위안부 발언에 日 반발...“해결끝난 문제...용인못해”(연합뉴스)
	02.28		日법원, 한국·대만 피폭자 유족 손배소 또 기각(연합뉴스)
	03.01		日, 文대통령 3.1절기념사에 “극히 유감...절대 못받아들여” 반발(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02.27		러시아 외무부 “문 대통령 ‘북미 직접대화 강조’ 환영”(연합뉴스)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02.24		中언론, 美의 새 대북제재에 ‘공세’...“남북화해 분위기 깨뜨려”(연합뉴스)
	02.25		중국 외교부, 美의 일방적 대북 제재 결연히 반대(연합뉴스)

	02.27	中인민일보 “美, 한반도 긴장완화 정세에 후진기어 넣지말라” (연합뉴스)	
		北대화론 부상에 美 “조건맞아야” 관망, 中 대화촉구, 日 경계론 (연합뉴스)	
	02.28	美상무부,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최고 106% 관세 폭탄(연합뉴스)	
	03.01	푸잉 中전인대 주임 “북·미는 ‘올림픽휴전’ 끝내지 말아야”(연합뉴스)	
		“모든수단 동원”…트럼프, 올해 무역정책으로 ‘중국압박’ 천명 (연합뉴스)	
		中, 트럼프 수입 철강 규제조치 발표 예고에 “WTO 규정 무시” (연합뉴스)	
		中, 美상원 ‘대만여행법’ 통과에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반발 (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02.26		北 북미대화 의향에 日 ‘긴장’… 경계론 퍼며 ‘일본 패싱’ 우려 (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02.24		러시아 “한반도, 급격한 상황 전개… 미·러 대화 필요”(연합뉴스)
	02.25		러시아 “북미 직접대화 지지… 양국에 ‘기회의 창’ 이용 설득 중”(연합뉴스)
	02.26		유럽정가에도 불똥 튀기는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연합뉴스)
	03.01	美, ‘시리아 화학무기’ 러 책임론 제기…러 “증거 대라”(연합뉴스)	

			푸틴, 연례 국정연설서 ICBM 등 첨단 핵전력 과시...미국에 경고(연합뉴스)
	03.02	푸틴 신형 핵미사일 개발 주장에 美 강력 반발...“무기감축 파기”(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03.01	中매체, 文대통령 3·1절 기념사 신속보도...“日역사인식 비판”(연합뉴스)	
			일본, 한국·중국에 ‘한중일 정상회의 5월초 개최’ 타진(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8. 02. 26.

■ 미 국무부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해결과 별도로 진전될 수 없어”(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북측이 북미 대화에 대한 전향적 의향을 밝힌 데 대해 한미 간 대응 공조를 강조하며 남북관계 진전과 북핵 해결이 따로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
-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을 위해 방남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북미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에 “북미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답한 데 대한 반응임.
- 저스틴 히긴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이러한 북측의 입장에 관한 연합뉴스의 서면질의에 “우리는 북한에 대한 일치된 대응에 관련해 한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밝힌 대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것과 별도로 분리해서 진전될 수 없다”고 말했음.

■ 이방카 “최대 압박이라는 한국과의 공동 입장이 매우 중요”(연합뉴스)

-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 참석차 방한한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보좌관은 25일 “우리는 북한에서 50마일 떨어진 곳에 있다. 그래서 최대 압박이라는 미국의 입장, 그리고 우리의 동맹인 한국과의 공동 입장을 확인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함.
-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폐회식에 참석한 이방카 보좌관은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이번 방한 기간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기 위한 최대 압박 작전을 옹호하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음.

■ 미 국방 차관보 “평창패럴림픽 뒤 한미 연합훈련 실시”(연합뉴스)

-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태 차관보는 26일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연기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패럴림픽(3월 9~18일) 폐막 후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 중인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방위성에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징후가 없다”며 이같이 말함.

2018. 02. 27.

■ 북미 ‘대화조건’ 살바싸움 돌입…정부 ‘중재외교’ 본격화(연합뉴스)

- 북한의 ‘대화 용의’ 표명에 미국이 ‘적절한 조건(right condition)하의 대화’로 응수하면서 북미가 대화 재개에 앞서 치열한 살바 싸움에 돌입한 양상임.
- 평창동계올림픽 계기에 방남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지난 25일 “북미 대화를 할 충분한 용의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해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들은 대화를 원하고 있으나 우리는 오직 적절한 조건 아래에서만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밝힘.
-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북한의 최근 행보가 제재·압박의 성과인 만큼 압박을 지속해 최대한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인식과 의지가 내포된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음.

2018. 02. 28.

■ 美대사대리 “한미훈련 추가 연기 가능성 없어”(연합뉴스)

- 내퍼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정동 주한미대사관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질문받자 28일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이후로 연기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추가 연기 가능성은 없다”고 답함.
- 내퍼 대사대리는 “저희가 한국 정부와 동맹국으로서 긴밀하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미연합훈련과 올림픽이 겹치지 않도록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와 같은 체스처를 취한 것은 올림픽 정신에 대한 존중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올림픽을 성공적 치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부연함.
-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동맹국으로서 억지 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갖춰나가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실질적 필요가 있다”며 “이런 필요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식은 연합 훈련 통해서 가능하다”고 밝힘.

■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해군 독도함서 이·착함 훈련(연합뉴스)**

- 28일 한미 군 당국에 따르면 유사시 우리 해군 함정과 미 육군 헬기의 연합작전을 위해 우리 해군과 주한 미 2사단 예하 2항공여단은 지난 27일 남해상에서 2항공여단 헬기의 상륙함 착함 훈련을 함.
- 이번 훈련에는 2항공여단 소속 공격헬기 AH-64 ‘아파치’, UH-60 ‘블랙호크’ 등이 투입됐으며, 이들 헬기가 착함 훈련을 한 상륙함은 우리 해군의 1만4천500t급 독도함임.

■ **국방부 “美와 한미연합훈련 추가연기 협의한 바 없다”(연합뉴스)**

- 국방부는 28일 언론에 배포한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모 매체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추가 연기 협의했다’ 제하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 23일 국방부 장관은 미 의회 대표단과의 면담시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미관계에 대해 논의했으나 연합훈련 추가 연기 관련 협의한 바 없다”고 밝힘.
- 국내 일부 언론은 이날 미국 매체를 인용해 최근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 대표단의 한국 방문 당시 대표단과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한미 연합훈련의 추가 연기 방안을 협의했다고 보도함.

■ **청와대 “美에 한미연합훈련 추가 연기 요청한 적 없다”(연합뉴스)**

- 청와대는 28일 한국 정부가 최근 방한한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 대표단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재연기 방안을 논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힘.
-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우리 정부는 미 측에 한미연합훈련 재연기를 요청한 적이 없다”며 “보도에 인용된 보좌관이 잘못 브리핑한 것”이라고 말함.
- 이 관계자는 “한미훈련과 관련해 평창패럴림픽이 끝난 뒤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정부가 바로 하자거나 재연기 하자는 입장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덧붙임.

■ **미 국방부 “한반도 주둔은 한국 초청에 따른 것”(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문정인 대통령외교안보특보가 최근 워싱턴DC 강연에서 한국 대통령이 원하면 주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아직 그의 발언을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한국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함.

- 데이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동맹 동반자”라며 “우리가 우리의 태세와 미래에 대해서 내리는 결정들은 한국과 미국 간 동맹의 결정들이어야 한다”고 강조함.

2018. 03. 01.

■ **美상원의원 측 “한국과 한미훈련 추가연기 논의 안했다”(연합뉴스)**

- 미국 상·하원 군사위원회 대표단장으로 최근 방한한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 측은 한국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추가 연기를 요청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보도함.
- 인호프 의원실의 언론담당 비서관은 “한국과 올림픽 개최로 연기된 기존 연합군사훈련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올림픽 이후에도 훈련을 거듭 연장하는 방안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브리핑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함.

2018. 03. 02.

■ **백악관 “한미정상, 긴밀한 협력 유지기로 약속”(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전화통화에서 “북한과의 어떠한 대화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분명하고 확고한 목표로 삼아 이뤄져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에 대해 언급했다”고 백악관이 밝힘.
- 백악관은 이날 성명에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과 남북대화에 관련된 진전사항들에 관해 설명했다”면서 “두 정상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소개함.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을 축하하려고 한국의 문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이방카 트럼프 보좌관이 각각 이끈 개막식과 폐막식 미국 대표단을 문 대통령이 환대해준 데 대해 사례했다”고 덧붙임.

나. 한·중 관계

2018. 02. 28.

■ 정부, 中대사 불러 ‘군용기 KADIZ 진입’ 항의·재발방지 요구(연합뉴스)

- 외교부는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과 관련, 추귀홍(邱國洪) 주한 중국대사를 27일 초치해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힘.
-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중국 군용기 KADIZ 진입 관련 외교부 대응 상황”이라며 “27일 저녁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 금번 사건 발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힘.
- 이 당국자는 이어 “외교부는 중국 군용기의 우리 방공식별구역 진입에 대해 국방부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임.

■ 인민일보, 韓美군사훈련 가능성 경계…“유관국들, 막대한 책임”(연합뉴스)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은 28일 ‘동계올림픽 후 한반도 정세의 냉온’이라는 제목의 1면 논평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을 계기로 한미군사훈련이 임박했다고 경계하면서, 북한과 미국은 조속히 직접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함.
- 이 신문은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은 서로 선의를 보냈고 고위급 대화와 경기장 내외에서 상호 교류로 대치 국면의 한반도 정세에 온화한 분위기를 불어넣었다”고 평가함.
- 신문은 “올림픽 폐막에도 남북 간에 여운이 남아 접촉과 대화의 염원을 보이며 ‘북미가 남북 관계의 공동 발전에 응해야 한다’고 간주하고 있고 북한도 미국과 대화 의사를 보였다”고 언급함.

■ 中외교부, 문대통령의 북미대화 중재 환영…“직접 대화 필요”(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미국은 대화의 문턱을 낮추고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북미 대화를 위한 중재에 나서자 중국 외교부가 환영하고 나섬.
-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이와 관련해 “우리는 (문 대통령의) 이런 표명을 장려할만하다고 생각하며 각국은 진심으로 이를 고려할 만하다”고 밝힘.
- 그는 “한반도 문제의 핵심은 안전 문제이며 핵심 문제의 해결 관건은 북미 양측에 있다”면서 “진정으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정세의 진정한 전환을 이루려면 북미간 직접 대화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다. 한·일 관계

2018. 02. 26.

■ 강경화, 유엔서 위안부 언급 “과거 잘못 반복해서는 안 돼”(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제37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함.
- 지난해 말 정부가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발표한 뒤 국제무대에서 정부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임.
- 강 장관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에서 피해자 중심 접근이 결여돼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 가족, 시민단체와 협력하겠다”고 말함.

2018. 02. 27.

■ 강경화 유엔 위안부 발언에 日 반발…“해결끝난 문제…용인못해”(연합뉴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유엔인권이사회(UNHRC) 총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2015년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로 해결된 문제라며 반발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7일 보도함.
-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제네바 주재 일본대사는 전날(현지시간) 강 장관의 기조연설 후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는) 한일합의로 해결이 끝난 문제”라며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고 주장함.

■ 외교부 “강경화 유엔 위안부 발언, 정부 원칙적 입장 표명”(연합뉴스)

- 외교부는 2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유엔인권이사회(UNHRC) 총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는 취지라는 물음에 대해 “강 장관의 발언을 지난 합의와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힘.
-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장관의 발언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위안부 문제를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 노력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함.

- 이어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보편적 여성인권 문제라는 점을 감안, 인권이사회 등 관련 국제회의 시 이러한 기본입장을 지속 견지해 오고 있다”고 덧붙임.

2018. 02. 28.

■ **日법원, 한국 대만 피폭자 유족 손배소 또 기각(연합뉴스)**

- 일본에서 원폭 피해를 본 한국인과 대만인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전함.
- 보도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지방법원과 히로시마(廣島)지방법원은 히로시마에서 피폭 후 한국과 대만으로 돌아간 한국인과 대만인 유족들이 제기한 손배소에서 이날 원고 측 청구를 각기 기각함.

2018. 03. 01.

■ **日, 文대통령 3.1절기념사에 “극히 유감…절대 못받아들여” 반발(연합뉴스)**

-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을 위안부 문제의 가해자로 지칭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것에 대해 “2015년 한일 (정부간) 합의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했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은 한일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함.
- 문 대통령은 이날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며 “전쟁 시기에 있었던 반인륜적 인권범죄 행위는 끝났다는 말로 덮여지지 않는다”고 일본 정부를 비판함.
- 문 대통령은 독도에 대해서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우리 땅”이라며 “지금 일본이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강조함.

라. 한·러 관계

2018. 02. 27.

■ **러시아 외무부 “문 대통령 ‘북미 직접대화 강조 환영’(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는 “우리는 미국과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고 한 문 대통령의 언급에 주목했다”면서 “우리는 이런 요구를 지지하며, 이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활동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북미 간 직접 대화의 길을 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일치한다”고 논평함.

- 러시아 외무부는 “문 대통령의 언급은 쌍방이 군사행동의 수위를 낮추고 직접 접촉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러시아-중국의 로드맵과 일치한다”, “러시아는 남북 당국 간의 화해 협력 증진 노력을 지지한다고 표명한 바 있다”라고 덧붙임.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8. 02. 24.

■ 中언론, 美의 새 대북제재에 ‘공세’...“남북화해 분위기 깨뜨려”(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를 단행한 데 대해 중국 언론은 이번 조치가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함.
- 관영 신화통신은 24일 평론을 통해 “미국의 새 대북제재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와중에 발표됐다”며 이같이 전함.
- 이 통신은 구체적으로 “북한은 평창올림픽에 응원단과 고위급 대표단 등을 파견해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줬다”며 “그러나 미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다고 말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새 대북제재를 발표했다”고 지적함.

2018. 02. 25.

■ 중국 외교부, 미의 일방적 대북제재 결연히 반대(연합뉴스)

- 중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를 단행한 데 대해 결연한 반대의사를 표명함.
- 경샹(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기자문답형식의 성명에서 중국은 미국이 국내법에 근거해 중국의 기업과 개인을 일방적으로 제재하고 “확대관할법(long-arm jurisdiction)‘을 적용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힘.
- 경 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 미국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으며 미국이 즉각 잘못된 조치 시행을 중단하고 양국의 협력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힘.

2018. 02. 27.

■ **中인민일보 “美, 한반도 긴장완화 정세에 후진기어 넣지말라”(연합뉴스)**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27일 미 행정부의 사상 최대 규모 대북제재를 겨냥해 한반도 긴장완화 정세에 후진기어를 넣지 말라며 강하게 비난함.
- 이 신문은 이날 “미국은 왜 한반도 완화 정세에 후진기어를 넣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북 양측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를 회복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가운데 미국은 제재라는 ‘큰 몽둥이’를 들고 극단적인 대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며 미 행정부를 직접 겨눴음.

■ **北대화론 부상에 美 “조건맞아야” 관망, 中 대화촉구, 日 경계론(연합뉴스)**

-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론이 탄력을 얻으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이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음.
- 북한과의 대화 당사자인 미국이 문을 열어놓으면서도 ‘적절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붙인 반면, 중국은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환영하며 북미 직접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일본은 ‘최대 압박’을 강조하면서 북미 대화의 성사 가능성에 경계심을 보이는 분위기임.

2018. 02. 28.

■ **美상무부, 중국산 알루미늄 포일에 최고 106% 관세 폭탄(연합뉴스)**

- 미국 상무부가 27일(현지시간) 중국산 수입 알루미늄 포일(foil)에 대해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결과 중국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불공정 보조금을 받고 미국 내에서 덤핑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으며, 최고 106%의 반(反)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함.
- 이 신문은 이날 “미국은 왜 한반도 완화 정세에 후진기어를 넣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남북 양측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대화를 회복하고 협력을 도모하는 가운데 미국은 제재라는 ‘큰 몽둥이’를 들고 극단적인 대북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며 미 행정부를 직접 겨눴음.

2018. 03. 01.

■ **푸잉 中전인대 주임 “북·미는 ‘올림픽휴전’ 끝내지 말아야”(연합뉴스)**

- 푸잉(傅瑩)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의 외사위원회 주임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외교적 해빙기를 북한과 미국이 대화 재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함.
- 푸 주임은 먼저 “한국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이 이제 끝났지만, 한반도에서의 외교적 해빙기가 얼마나 오랜 기간 지속할지는 불투명하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으며, 그는 이어 “미국과 북한 사절단이 올림픽에서 서로 수 미터 떨어진 곳에 머물면서도 회동을 거부했지만 양측은 직접 또는 한국을 통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전함.
-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함으로써 그들의 진정성과 평화적 의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핵 프로그램이 보장해 왔다고 믿는 상대적 안보를 포기할 의향이 없다고 푸 주임은 분석했으며, 이에 따라 푸 주임은 미국과 북한이 평창 올림픽 기간의 휴전 상태를 평화 협상의 기회로 이용할 것을 주문함.

■ **“모든수단 동원”...트럼프, 올해 무역정책으로 '중국입박' 천명(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28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8 무역정책 어젠다·2017 연례 보고서'에서 “미국은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모델이 국제 경쟁력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힘.
- 이와 함께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했던 경제개혁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최근 몇 년간 '시장 원리'와 더 멀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함.
- 또 “중국은 원하는 무역정책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면서도 “미국은 주권국가로서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다”고도 말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중국의 지적 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불공정한 관행에 따른 수혜를 막기 위해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힘.

■ **中, 트럼프 수입 철강 규제조치 발표 예고에 “WTO 규정 무시”(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1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최종 규제조치를 결정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함.
- 화 대변인은 중국 상무부 발표 내용을 인용해 “이번 조사 과정과 결과를 보면

미국은 WTO 규정을 무시하고, 중국 기업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한다”고 말함.

- 화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불합리하고 과도하게 무역 구제 조치를 사용했다”면서 “이런 조치는 미국의 관련 산업을 부흥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미국 내 취업과 많은 미국 소비자의 이익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함.

■ 中, 美상원 '대만여행법' 통과에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반발(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상원이 미국과 대만 고위 공직자가 자유롭게 상대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한 '대만여행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했다며 강력히 반발했음.
- 화 대변인은 “이 법안과 관련 조항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중국은 법안 통과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면서 “이미 미국 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힘.

나. 미·일 관계

2018. 02. 26.

■ 北 북미대화 의향에 日 '긴장'...경계론 펴며 '일본 패싱' 우려(연합뉴스)

- 북한이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보내 북미 대화 의향을 밝힌 데 대해 일본 정부와 언론들이 잔뜩 경계하고 나섬.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역시 적어도 북한과의 '탐색대화'에는 나설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자, 연일 대북 제재 강화라는 강경론을 펴온 일본에선 자국을 배제한 채 '남북한+미국+중국' 간에 모종의 움직임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일본 패싱'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음.
- 26일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회동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미국·일본 연대를 갈라놓으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경계를 강화하면서 미 행정부와 의사소통을 긴밀히 할 방침이라고 보도함.

다. 미·러 관계

2018. 2. 24.

■ 러시아 “한반도, 급격한 상황 전개… 미·러 대화 필요”(연합뉴스)

- 아시아태평양 담당으로 북핵 6자회담 러시아 수석대표이기도 한 모르굴로프 차관은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급격한 상황 전개가 미국과 러시아 간의 활발한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믿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 이 발언은 미국이 무역회사와 선박 등 57곳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사상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를 단행한 다음 날 나왔으며, 모르굴로프 차관은 북한 관련 논의를 위해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모스크바로 초청했다는 사실을 재차 밝혔다.

2018. 2. 25.

■ 러시아 “북미 직접대화 지지…양국에 ‘기회의 창’ 이용 설득 중”(연합뉴스)

- 러시아는 미국과 북한 간 직접 대화를 지지한다고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24일(현지시간) 밝혔다.
- 북핵 6자회담 러시아 측 수석대표이기도 한 모르굴로프 차관은 이날 자국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미국과 북한 간 직접 대화를 일관되게 지지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이는(북미대화는)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마련한 한반도 사태 해결 ‘로드맵’(단계적 해결 방안)의 2단계 요소이기도 하다”면서 “우리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 방안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촉구함.

2018. 2. 26.

■ 유럽정가에도 불똥 튀기는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재작년 대선 때 ‘트럼프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를 겨냥한 비리수사 여파가 유럽 전직 총리들까지 덮쳤다고 함.
- 25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저명한 유럽 정치 지도자 출신들이 과거 우크라이나에서 매너포트의 여론 공작 혐의에 연루된 정황을 보여주는

이메일 등이 확인됨.

- FT에 거론된 이들 지도자는 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자 이탈리아 총리를 지냈던 로마노 프로디, 알프레드 구젠bauer 전 오스트리아 총리, 알렉산데르 크바시니에프스키 전 폴란드 대통령 등임.

2018. 03. 01.

■ **美, '시리아 화학무기 리 책임론 제기...러 "증거 대라"(연합뉴스)**

- 로버트 우드 미국 군축담당 대사는 28일(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열린 군축회의(Conference on Disarmament)에서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모두 제거했다는 러시아의 주장은 엉터리”라고 말함.
- 그는 또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송배를 부인하는 러시아는 믿을 수 없다”며 시리아 정부가 화학무기를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할 의무를 러시아가 위배했다고 비판함.
- 시리아 정부는 반군 장악지역에서 정부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거듭 부인했으며, 후삼 알라 시리아 대사는 “시리아는 화학무기를 갖고 있지 않다”며 누스라 전선 등 '테러 집단'(반군)이 화학무기를 사용했고 이슬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도 일부 화학무기를 갖고 있다고 반박함.

■ **푸틴, 연례 국정연설서 ICBM 등 첨단 핵전력 과시...미국에 경고(연합뉴스)**

- 푸틴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TV로 생중계된 국정연설에서 미국이 지난 1972년 옛 소련과 체결했던 '탄도요격미사일제한조약'(Anti-Ballistic Missile Treaty/ABM 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자국과 외국에 미사일 방어(MD)시스템을 구축한 데 대한 대응으로 첨단 전략무기들을 개발했다고 밝힘.
- 그는 미국이 자국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는 물론 동유럽의 루마니아와 폴란드에 MD 시스템을 배치하고, 일본과 한국으로도 시스템을 확장하려 계획하고 있다고 지적함.
- 푸틴은 그러면서 약 2시간에 걸친 연설에서 45분가량을 러시아가 새로 개발한 차세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르마트'(RS-28)을 비롯한 각종 전략무기들을 설명하는데 할애함.

2018. 03. 02.

■ **푸틴 신형 핵미사일 개발 주장에 美 강력 반발...“무기감축 파기”(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신형 핵 추진 미사일 개발을 발표하자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즉각적으로 강력히 비판함.
- AFP통신에 따르면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푸틴 대통령의 연설은 “무책임하며 무기감축 협정을 파기하겠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또 국정연설을 통해 새로 개발했다는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하는 가상 영상을 내보내는데에도 강력 항의함.

라. 중·일 관계

2018. 03. 01.

■ **中매체, 文대통령 3·1절 기념사 신속보도...“日역사인식 비판”(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며 일본의 역사인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고 중국 관영 매체인 중앙(CC)TV가 신속히 보도했는데, CCTV는 1일 문 대통령의 기념사가 끝난 뒤 30여 분만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소개함.
- CCTV는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3·1절 기념행사에 국내외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를 한반도의 비참한 역사의 가해자로 지칭하면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끝났다’는 표현을 사용해 역사를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전함.

■ **일본, 한국·중국에 '한중일 정상회의 5월초 개최' 타진(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애초 4월 개최를 추진하던 한중일 정상회의를 5월 초에 열자고 한국과 중국에 제안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함.
- 일본 정부는 4월 28일~5월 6일인 일본의 '골든위크' 연휴가 끝난 직후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한국, 중국에 물었고, 일본 측의 제안에 대해 한국은 응하겠다는 의향을 보였지만, 중국은 회답하지 않았음.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IV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2.23	헤일리 대사 “대북 압박 성과...이제는 노동자 풀을 차례”(미국의소리)
	2.26	앰네스티, ‘강제북송 탈북자 보호’ 범세계적 청원캠페인(자유아시아방송)
	2.27	폴란드, 북 노동자 고용기관11곳 감찰(자유아시아방송)
		유럽연합일본 제네바서 ‘북 인권’ 개선 촉구(자유아시아방송)
	2.28	유엔, 북한 주민 7명 ‘자의적 구금 피해자’ 판정...석방 촉구(미국의소리)
		미 관리 “북 유엔 인권기구와 협력 거부”(자유아시아방송)
	3.1	성통만사, 유엔에 ‘북한 아동인권 침해’ 서면진술서 제출(자유아시아방송)
3.2	유럽연합 “일본과 공동으로 북한인권결의안 제출할 것”(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2.26	위성사진 결과, 요덕 수용소 수감자 일부 인근 탄광 이전 가능성(자유아시아 방송)
	3.1	북한의 프로파간다, 과거보다 영향 못 미쳐(미국의소리)
	3.2	통일부, 국회에 공문...“북한인권재단 출범에 협조 당부”(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2.27	한국 외교장관 “북한, 핵 포기하고 인권 개선 나서야”(미국의 소리)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특이사항 없음
대북지원	2.23	WFP 지난해 대북 식량지원, 21년 만에 최저(미국의소리)
	3.1	아일랜드 NGO, 올해 200만 달러 규모 대북 지원(미국의소리)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8. 2. 23.

■ 헤일리 대사 “대북 압박 성과...이제는 노동자 끊을 차례”(미국의소리)

-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을 겨냥한 최대 압박이 성과를 내고 있다며, 북한이 이를 탈피하기 위해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다고 말함. 북한 수출의 90%를 옥션 유엔 안보리는 이제 북한 노동자 프로그램을 끊고 있다고 강조함.
- 헤일리 대사는 22일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행한 연설에서 북한 정권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사용할 돈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며, 따라서 이런 시험발사로 다른 나라를 위협할 역량도 줄어들었다고 말함. 이어 이런 사실이 그 어느 것보다도 김정은 정권이 한국에 손을 내밀도록 만들었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위기관리를 하도록 유발했다고 지적함.
- 이어 안보리는 현재 북한에 수익을 안겨주는 해외 노동자 프로그램을 근본적으로 폐쇄하고 있다고 밝힘.

2018. 2. 26.

■ 앰네스티, ‘강제복송 탈북자 보호’ 범세계적 청원캠페인(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가 최근 중국에서 체포돼 강제복송된 탈북민 가족들의 안전 보장을 촉구하는 편지를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에게 보내는 온라인 청원 운동을 시작함.
- 지난해 11월 중국 랴오닝성 선양에서 체포돼 강제 복송된 탈북자 10여명 중 4살 남자아이와 엄마가 포함돼 국제사회의 큰 안타까움을 자아냄.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복송된 지 3개월이 된 현재까지, 아이의 엄마인 구정화(중국에서는 이수정씨로 알려짐)씨가 여전히 함경북도 회령시 보위부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채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힘.
- 그러면서 이들을 포함해 강제복송된 탈북민 10여명의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온라인 청원운동인 ‘포켓 항의’(Pocket Protest)를 23일 시작했다고 밝힘. ‘포켓 항의’는 국제앰네스티에 자기의 이름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운동임.
- 앰네스티에 따르면 이번 ‘포켓 항의’에 참가한 청원자의 이름이 적힌 편지를 김정은 위원장 등 북한 당국에 보내, 구정화씨를 비롯한 구금된 탈북민들이

- 정기적인 의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임.
- 또 이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조속히 열어 석방할 것을 북한 당국자들에게 서신을 통해 촉구한다는 취지도 있음.
 - 앞서 지난 15일 구씨의 남편 이태원 씨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강제 복송된 구정화씨와 아들이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국제사회가 이들의 석방을 위해 나서줄 것을 호소함.

2018. 2. 27.

■ 폴란드, 북 노동자 고용기관 11곳 감찰(자유아시아방송)

-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National Labour Inspectorate)은 2017년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폴란드 내 기관 11곳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다고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힘.
- 국가노동감독원 야로스와프 레쉬니에프스키(Jaroslaw Lesniewski) 국장은 전자우편을 통해 2017년 기준으로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가 264명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함.
- 국가노동감독원은 이중 2016년에 감찰하지 않았던 북한 노동자 159명을 대상으로 폴란드 노동법 저촉 여부 등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다고 밝힘. 하지만 국가노동감독원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기관의 불법행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은 고용주가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휴식시간, 휴일 등을 준수하는지 또 노동 허가증에 기록된 것과 다른 일이나 일터에 배치하는지 여부, 추가 근무 수당이나 임금을 제 때 지불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감찰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회사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불만이 접수될 경우 추가 조사도 단행하는 것으로 알려짐.

■ 유럽연합·일본 제네바서 '북 인권' 개선 촉구(자유아시아방송)

- 스위스 제네바에서 27일 속개된 제37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유럽연합의 스타브로스 램브리니디스(Stavros Lambrinidis) 인권특별대표는 유럽연합은 이번 회기에도 일본과 함께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힘.
- 유럽연합은 북한 정권에 의한 심각한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이 지속되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압박이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오길 희망한다고 램브리니디스 특별대표는 강조함.

- 일본측 대표도 북한의 심각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유린을 우려한 국제사회는 유엔총회에서 13년 연속 북한인권 결의를 채택했다고 말함.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이 같은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결의를 통해 촉구했다고 그는 강조함. 그는 특히 최대한의 대북 압박 정책이 북핵 문제의 해결에 절실하다고 덧붙임.

2018. 2. 28.

■ 유엔, 북한 주민 7명 '자의적 구금 피해자' 판정...석방 촉구(미국의소리)

-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 2명 등 북한 주민 7명이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됨.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난 해 11월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의견을 채택했다고 밝힘.
- 자의적 구금이란 개인이 법률에 반하는 범죄를 자행했다는 증거 없이 체포 구금되거나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포 구금되는 것을 뜻함.
- 실무그룹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 강미숙 씨는 중국 엔지로 탈출했다 1999년 11월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됨. 또한 중국에서 탄광 노동자로 일했던 김호석 씨는 2001년 5월 한국으로 가기 위해 중국과 몽골 국경지역으로 갔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강제 복송됨.
- 실무그룹은 두 사람이 체포된 이후 재판을 받은 적이 없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구금의 합법성 여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었다고 밝힘. 그러면서 이들 피해자들에 대한 구금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관련 조항에 위배되는 자의적 구금이라고 지적함.
- 또한 지난 2001년 5월 중국 접경지역인 온성군에서 체포된 주일 씨와 2000년 11월 양강도에서 체포된 김철영 씨, 2000년 3월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체포된 김은호 씨, 1999년 11월 함흥에서 체포된 김광호 씨, 2001년 9월 정보기관 요원들에게 체포된 윤성민 씨 등 북한 주민 5명도 자의적 구금의 피해자로 판정됨. 실무그룹은 이들 다섯 명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정당화할 법률적 기반이 없다고 지적함.
- 그러면서 이들의 자유를 박탈한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위배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밝힘.

- 실무그룹은 이 같은 판정을 내리기에 앞서 북한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으나 북한 정부는 실무그룹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관련 내용은 한국 등 적대세력의 음모라며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했다고 실무그룹은 전함.

■ 미 관리 “북 유엔 인권기구와 협력 거부”(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국무부의 메리 캐서린 피 국제기구담당(Bureau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차관보 대행은 2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속개된 제 37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에서 유엔 기구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비난함.
- 피 차관보 대행은 북한이 시리아, 이란 등과 함께 유엔과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사국들이 협력해 이들의 인권 상황에 관한 강력한 결의를 채택할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함. 피 차관보 대행은 미국은 보편적 인권과 기본 자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2018. 3. 1.

■ 성통만사, 유엔에 ‘북한 아동인권 침해’ 서면진술서 제출(자유아시아방송)

- 한국의 인권단체가 제37차 정기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아동인권 학대 실태를 고발하기 위해 제출한 서면진술서(Written Statement)가 공개됨.
- 한국의 대북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이른바 ‘성통만사’(People for Successful Corean Reunification·PSCORE)가 지난달 28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서면진술서가 1일 공개됨.
- 유엔에 따르면 성통만사는 진술서에서 “북한의 아동 인권 상황은 매우 충격적이지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내 아동 노동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지적함.
- 또 “북한은 법률상으로는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법률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북한에서의 아동 권리 남용은 체계적이고, 아동이 농업 노동 자원으로만 여겨진다”고 강조함.
- 그러면서 어린이들이 하루의 상당 시간을 농장과 광산에서 일하거나, 고철, 종이, 토끼 가죽과 같은 특정 품목을 수집하며, 건설 작업에 참여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고 설명함. 또 산에서 나무를 하고 마을에서 잡초를 제거해야한다고 지적함.

2018. 3. 2.

■ 유럽연합 “일본과 공동으로 북한인권결의안 제출할 것”(미국의소리)

- 유럽연합이 올해도 일본과 함께 북한인권결의안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힘.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촉구할 계획임.
- 유럽연합이 일본과 함께 제37차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인권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 제네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는 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정권에 의한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계속되는 점을 감안해, 유럽연합은 일본과 함께 다시 한 번 강력한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함.
- 그러면서,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끔찍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인권 유린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함. 아울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기도 1년 더 연장할 것이라고 덧붙임.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8. 2. 26.

■ 위성사진 결과, 요덕 수용소 수감자 일부 인근 탄광 이전 가능성(자유아시아방송)

- 요덕 정치범 수용소로 알려진 함경남도 요덕군의 ‘제15호 관리소’가 2014년부터 해체 작업을 해왔는데, 수감시설과 일부 건물을 철거하면서 수감자들의 행방에도 관심이 쏠림.
-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에 따르면 수용소 내 수감시설이 해체됨과 동시에 인근 탄광 지역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조성됐는데요. 여러 정황을 분석해보면 수감자들이 이곳으로 이전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도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18호 관리소’의 사례를 고려하면, 새 주거단지는 고원 탄광의 노동자를 위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음.
- ‘15호 관리소’가 완전히 해체됐는지는 확실치 않음. 해체된 것으로 알려진 ‘14호 관리소’, ‘18호 관리소’가 다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 미국 정부와 인권 단체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운영을 심각한 인권 문제로 인식하는 만큼 정치범 수용소의 변화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임.
- 미국의 상업위성이 촬영한 위성사진에 따르면 요덕 정치범 수용소는 2014년부터 일부 건물과 시설이 철거되기 시작했고, 지난해까지 수감시설이나 경제활동 구역 등도 해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최근 촬영된 위성사진에 따르면 '제15호 관리소'에서 남쪽으로 약 30km 떨어진 평안남도 수동구역 인근에 새 주거단지가 조성됨. 10여 개 지역에서 새 아파트와 주택 등이 지어졌는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주거단지가 고원 탄광 인근에 조성된 것으로 보임.
- 위성사진을 분석한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산하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벨빈 연구원은 '제15호 관리소'에 있던 수감자들이 고원 탄광 지역으로 이전했을 가능성을 제기함.

2018. 3. 1.

■ **북한의 프로파간다, 과거보다 영향 못 미쳐(미국의소리)**

- 북한에서 자연재해나 대규모 사고 소식을 언론이 그대로 보도하는 사례들은 거의 없음. 사고 규모가 워낙 커서 평양 시민들의 민심 동요를 의식해 당국자가 뒤늦게 사과한 것으로 풀이됐던 4년 전 평양 평천구역 아파트 붕괴 사고를 제외하면 마땅한 사례를 찾기 힘든 상황임.
- 이번 달에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도 3주 가까이 계속됐지만, 북한 매체들은 지금까지 모두 침묵하고 있음. 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선전 우상화, 미국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는 보도가 1면을 계속 채우고 있음.
- 톰 말리노스키 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앞서 'VOA'에 북한의 김씨 정권은 수령의 신격화와 숭배를 위해 국민의 기본 권리인 정보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고 비난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8. 2. 27.

■ **한국 외교장관 “북한, 핵 포기하고 인권 개선 나서야”(미국의 소리)**

-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이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함.
- 강 장관은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 37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재원을 주민들과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시키는데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말함.
-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계속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안보와 인권 측면에서 진로를 바꾸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함. 강 장관은 또 평창 동계올림픽의

정신이 북한의 인권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함. 평창올림픽 정신이 대회가 끝난 뒤에도 계속돼 한반도에 평화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임.

- 강 장관은 남북이산가족 상봉의 재개가 시급하다며, 이 문제는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한 인도적 문제이자 인권 문제라고 말함. 특히 대다수 이산가족들이 이미 사망했고, 생존자들은 80세를 넘었다며, 한국 정부는 계속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대화 재개를 북한에 촉구하고 있다고 밝힘.
- 아울러 북한에 구금된 한국인과 외국인들의 즉각적인 석방도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함.

2018. 3. 2.

■ 통일부, 국회에 공문...“북한인권재단 출범에 협조 당부”(연합뉴스)

-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 2년을 앞둔 2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국회가 협조해달라고 밝힘.
-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3월 3일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2년이 되는 날”이라며 “북한인권재단이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함.
- 그는 이어 “오늘 오전 국회에 공문을 보내 재단이사 추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면서 “북한인권법이 여야의 초당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만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밝힘.
- 이와 관련해 백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북한 인권 실태조사, 국제사회와의 공조, 민관협력 등을 통해 차분하고 내실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 특이사항 없음

5. 대북지원

2018. 2. 23.

■ WFP 지난해 대북 식량지원, 21년 만에 최저(미국의소리)

- 세계식량계획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의 실케 버 대변인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 12월 북한 74개 시, 군 내 임산부와 수유모, 어린이 등 취약계층 57만8천여 명에게 1천703t의 식량을 지원했다고 밝힘.
- 지원을 받은 취약계층에는 지난해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23개 시, 군 내 14만3천여 명의 여성과 어린이가 포함됐다고 실케 버 대변인은 말함. 지난 한 해 세계식량계획이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총 2만1천777t으로, 1996년 이후 21년 새 가장 적은 규모임.
- 지난해 세계식량계획의 지원이 감소한 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모금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실케 버 대변인은 밝힘.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3월 초부터 자금 부족으로 북한 유치원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강화식품 지원을 일부 중단함. 자금 지원이 제 때 이뤄지지 않아 영양강화식품 생산에 필요한 비타민 혼합식품 구입과 운송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세계식량계획의 설명임.
- 세계식량계획은 비타민 혼합식품의 부족으로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유치원 어린이 19만여 명에 대한 영양강화식품 지원을 중단함. 다만 이들에게 표준배급량의 3분의2정도 분량의 영양강화 과자는 제공함. 하지만 지난 11월부터는 유치원 아이들 19만 명에 대한 식량 지원을 전면 중단함. 또 올해 1월부터는 식량을 지원하는 지역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힘.
- WFP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북한 유치원 아동들에 대한 지원을 재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힘.

2018. 3. 1.

■ 아일랜드 NGO, 올해 200만 달러 규모 대북 지원(미국의소리)

- 아일랜드의 비정부기구 ‘컨선 월드와이드’는 올해 162만 유로, 미화 2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힘. 이 단체는 28일 ‘VOA’에, 이 예산으로 황해남북도와 강원도에서 식량안보와 식수위생 사업, 재난위험 감소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함.
- 식량안보 사업은 보존농법을 전수해 간단한 농기구와 적은 자원으로도 식량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올해는 특히 강원도

주민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인분을 농사에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이오 퇴비법 시범사업’을 시작함.

- 컨선 월드와이드 한국지부의 이준모 대표는 “새롭게 시작된 바이오 퇴비 사업은 북한에 비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썩히지 않은 인분을 바로 밭에 뿌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 때는 여러 가지 기생충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이 썩혀서 양질의 비료를 만드는 과정을 교육하고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힘. 이 단체는 또 황해남북도와 강원도 지역 주민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식수, 위생 사업도 진행함.
- 식수 사업은 전력난에도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태양열과 중력을 이용한 상수도 시설을 구축하는 게 핵심으로, 지금까지 황해도와 강원도 18개 군 54개 협동농장과 16개 마을에 상수도와 급수 시설 80여 개를 설치함.
- 이 대표는 시설이 노후화 되고 전력난이 가중되면서 취약계층이 깨끗한 물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올해 황해북도와 강원도 협동농장을 중심으로 홍수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의 자연재해로 인한 회복력을 높이는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임.